

국산 과일값 치솟자 수입 과일 인기

딸기 25%·노지 감귤 114%↑
오렌지·바나나·망고 등 인기
신선과일 수입액 역대 최대 규모



제철을 맞은 국산 과일인 딸기와 노지 감귤이 전년 대비 각각 25%, 113%가량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 국산 제철 과일 가격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 불안으로 비싸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수입산 신선과일 수입액은 20.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불안으로 딸기와 감귤 등 국산 제철 과일 가격이 끝없이 치솟고 있다. 이에 서민들이 비싼 국산 제철 과일보다 비교적 저렴한 수입산 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신선과일 수입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딸기(100g·상품) 소매가격은 1860원으로 평년(1488원)보다 25% 상승했다.

지난해 말 제철을 맞은 딸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매가격이 100g 당 2500~2700원을 기록했던 것보다는 안정됐지만,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또 다른 제철과일인 노지 감귤(M과·10개)의 소매가는 지난 14일 기준 6650원으로 평년(3111원)보다 2배 이상 비싸고, 전년(5889원)과 전월(5615원)에 비해서도 각각 12.92%, 18.43% 높은 수준이다.

국산 과일들은 지난 2023년 여름 장마철 생육기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 병해충 피해 등으로 수급량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사과와 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대폭 상승한 바 있다. 이어 이미 가격은 오름대로 오름 가운데, 지난해 여름 생육기에는 9월이 넘어서도 폭염이 잇따르는 등 이상 고온현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지기도 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해 제철을 맞은 국산 과일들이 2년 연속 높은 가격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초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할인혜택과 더불어 비싼 국산 과일의 대체 품목으로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을 관세인하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과일 수요 분산 전략을 선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서민들이 지난해 고공행진하는 국산 과일 대신 비교적 저렴한 수입과일 구매를 늘리

면서, 지난해 신선과일 수입액이 역대 최대규모로 돌아왔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해 12대 주요 신선과일 수입액이 14억 4700만달러로 전년(12억 500만달러) 대비 2억 4200만달러(20.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기존 12대 주요 신선과일 수입액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8년(13억 3200만달러)을 8.6% 상회하는 수준이다.

주요 12대 신선과일은 국민 수요가 높은 수입 과일인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아보카도, 포도, 키위, 체리, 석류, 블루베리, 레몬, 자몽 등을 뜻한다.

신선과일 수입액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추세에 따라 지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주요 산지에서 엘니노 현상 등으로 작황 부진을 겪은 데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반 운임료 상승, 배송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의 이유로 수입액이 지속 감소해왔다. 이후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내 과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신선과일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선과일 수입액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KREI 역시 신선과일 수입액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REI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 등으로 과일 재배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이상기후 정황은 빈번해짐에 따라 국산 과일 공급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선과일 수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논이 밭 되는 세상 이젠 뭘 심어야 하나

경지면적 감소 속 재배 품목도 다양...논·밭 활용도 고심할 때

요즘 논과 밭을 혼용하면서 그 구분이 쉽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이 둘의 구별법은 명확하다. 논은 답(畓) 또는 수전(水田)이라고도 한다. 바닥은 판만하며 돌레를 흙으로 두렁을 만들고, 관배수(灌排水)를 조절하기 위해 관개수로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는 곳에 취수(取水) 물고를, 물이 흘러나가는 곳에 배수(排水) 물고를 만든 땅으로 주로 벼를 재배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농경지다.

논의 종류는 관개수의 배수상태에 따라서 건답(乾畓·마른논)과 습답(濕畓)으로 나누는데, 건답은 배수가 좋고 작토(作土)가 깊으며 투수성(透水性)도 비교적 양호해 벼의 생육에 이상적인 땅이다. 벼를 수확한 후 밭상태로 맥류 등 후작물을 재배하는데, 이를 답리작(畓裏作) 또는 이모작(二毛作)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습답은 배수가 나빠 항상 물을 댄 상태로 있어 토양의 환원이 심하고 생산력이 낮은 ‘B급’ 농지인데 답리작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있다.

반면 밭은 논처럼 물을 채우지 않고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는 농경지를 일컫는 말이다. 한자로는 전(田)이라고 한다. 밭은 재배 곡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토질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리기도 한다.

굳이 따져보면 인류의 농사는 논이 아닌 밭과 함께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경작지의 최초는 밭이며, 그 기원은 논보다 훨씬 앞선다. 그 시기는 대략 신석기시대인 기원전 6500년경 즈음으로 추정한다. 또 우리나라에서의 밭의 형성은 화전(火田)을 초기 형태로 보며 이후 휴한전(休閑田), 숙전(熟田)의 단계로 발전한 것으로 본다.

이는 농경지면적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밭 면적은 전통적으로 논보다 많았다. 일제강점기 이후 논 면적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밭의 비율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전체 경지면적은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밭의 비율은 서서히 높아졌다. 1996년에는 논이 경지면적이 120만 148ha, 밭의 경지면적이 74만 5332ha이

었는데, 2019년에는 논이 82만 9778ha, 밭이 75만 1179ha를 차지하고 있어 밭의 전체 경지면적 비율이 39.5%에서 47.5%로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경지가 2013년보다 약 20ha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은 77만5640ha로 2021년(78만440ha)보다 0.6%(4800ha) 감소했다. 밭은 75만 2597ha로 2021년(76만6277ha)보다 1.8%(1만3680ha) 줄었다.

경지면적에서 논과 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대에 따라 크게 다른데 전통적으로 전곡을 전작지대(田作地帶), 답전혼작지대(畓田混作地帶), 답작지대(畓作地帶)로 구분했다. 전작지대는 제주도를 비롯해 대부분의 북한지역이 이에 포함되는데, 총 경지면적 중 논이 비율이 20% 이하인 곳이다. 이곳에서는 맥류·두류·잡곡·근채류 등 재배가 주를 이룬다. 답전혼작지대는 중부지역으로 황해도와 강원도 및 충청북도도 포함하는데 논이 비율이 전체 경지면적의 20~50%에 달하는 곳을 이룬다. 답작지대는 경기도를 포함한 남부지역으로 논이 비율이 50~70%에 달하는 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가를 위해 올해 쌀 산업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정책과제로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을 골자로 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농업인 관련 단체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목표 달성 여부, 추진방식 등을 두고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감축’이나 ‘의무적 감축’이니,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느니 이런저런 지적이 일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이에 따른 논이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합심해서 묘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bigkim@kwangju.co.kr

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 협력국 50개국 이상 확대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 발표...2029년까지 신규 모델 발굴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오는 2029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국가를 50개국 이상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ODA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모델을 10개 이상 발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국제농업협력사업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농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모델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비영리단체 간 협업모델을 오는 2029년까지 10개 이상 발굴하고, 협력 국가는 지난해 33개국에서

오는 2029년 50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협력국 확대 및 민-관의 협력모델 발굴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국제 협력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각 기업들의 협력사업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들의 국제기구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보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밖에 기업들에게는 협력국들의 시장 수요와 더불어 농업 환경 전반을 분석한 뒤, 제도 정비와 생산 기반 구축,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등 시장 조사와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업시설들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협력사업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전담 조직으로 신설하고, 국제 협력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기획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교육 기관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평가 기관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같은 기관들과 함께 관련 부문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우수 국제 협력 사업을 고도화해 브랜드화하고, 해당 사례도 확산할 방침이다. 아프리카 쌀 생산을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은 협력국을 아프리카 남부까지 확대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 교육 등을 통한 지원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광주 분량농협, 주말농장 선착순 분양

2월 말까지 90개 농장

농협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분량농협 소유의 광산구 지산동 일대 주말농장을 2월 말까지 선착순 임대 분양한다.

분양 농장 면적은 약 4935㎡(1493평)으로, 7평형(6만원)짜리 42개, 10평형(7만원)짜리 48개

등 총 90개 농장이 제공된다.

농장에는 주차장, 화장실, 농기구 창고, 세척장 등 편의시설과 관수시설을 갖췄다. 광주시에 주소가 없는 시민이면 누구나 분량농협에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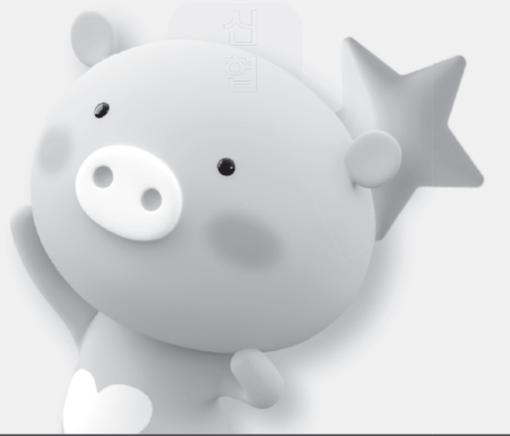
분량농협 관계자는 “농산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면서 여유로운 도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